시민고충처리위원회(제천시 음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사례

□ **민원 제목** : 출산 축하금 지원 요청 민원

□ **신청취지**

○ 민원인은 2019년 3월에 둘째 자녀를 출산하여 00동행정복지센터에 출산축하금을 신청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제천시 거주기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없어 선처를 하여 달라는 민원임.

□ **피신청인 주장**

○ 민원인은 2019년 3월에 둘째 자녀를 출산하여 00동행정복지센터에 출산축하금을 신청하였으나,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으로 인하여 민원인은(3개월에서 3일이 부족)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부서 담당자로부터 들었음.

○ 민원인은 4개월 전부터 제천시에 이사를 왔으며, 집구입 문제로 전입신고가 늦어짐을 감안하여 출산축하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선처를 요청하는 민원임.

□ **사실관계**

○ 민원인은 직장문제로 출산전 4개월 이전부터 제천시에 이사를 왔으나 주택구입 문제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시댁에서 거주하게 되었음.

○ 출산후 출생신고차 00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출산축하금을 신청하였으나 3개월에서 3일이 부족하여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임.

□ **관계 법령 등**

○ 제천시 출산축하금은 『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내용) 1항 “시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는 바,

- 민원인의 둘째 자녀의 출생신고와 부 또는 모의 출생일 기준 제천시 주민등록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지급규정에 부적합하여 출산축하금 지원이 불가함.

□ **판단 및 결론**

- 인구감소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례개정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해결 권고함.
- 그 결과 “제천시 임신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하여 민원해결함.
 - ☞ 일부개정일 : 2019.10.11.
 - ☞ 또한 개정규정의 지원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여 민원인 포함 5가구가 지원혜택을 받았음

※ 개정전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7.09.29 조례 제1444호
(일부개정) 2018.12.28 조례 제1548호

제4조(지원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지원한다.

1. 출산축하금 : 시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개정후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0.11.]

(제정) 2017.09.29 조례 제1444호

(일부개정) 2018.12.28 조례 제1548호

(일부개정) 2019.10.11 조례 제1619호

제4조(지원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지원한다.

1. 출산축하금 : 시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날이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급대상이 된다. <단서신설 2019.10.11.>

부 칙<2019.10.11 조례 제16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의 지원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적용한다.

□ **민원 제목 :** 00면 00리 ▽ ▽ ▽ 관정 시추 및 양수증지 요청 민원

□ **신청취지**

○ 00면 00리 마을 주민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하수를 이용하여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 ▽ ▽에서 관정을 시추하고 양수하고자 하고 있어 마을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중.소형 관정의 지하수 고갈이 예상된다.

□ **피신청인 주장**

○ 00면 00리 0반 000마을 주민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은 지하수를 이용하여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에, ▽ ▽ ▽에서 00면 00리 00-0번지에 총 ▽공의 관정을 굴착중에 있으며, 향후 많은 양의 지하수를 이용시 00리 0반 000마을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중,소형 관정의 지하수 고갈이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부족으로 영농에 애로사항과 피해가 발생하여 00리 00-0번지의 관정 굴착과 지하수 이용을 절대 반대하고 있는 민원임.

□ **사실관계**

○ 2009년 제천시(피고보조참가인:000)와 00 0리 마을간 지하수 개발에 따른 분쟁의 해결을 위한 청주지방법원의 조정권고안에 의거 1일 200톤 이내로 지하수 개발량을 제한하도록 하였음.
○ 00면 00리 마을은 현재 170여가구수에 32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상수도 설치전에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식수 및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었음.
※ 00리, 00리에 200여개의 중.소형관정이 있었으나 상수도 설치이후, 일부는 폐공을 하여 현재 120여개가 지하수 관정으로 신고되었음.
○ 2021.04.09.(금) ▽ ▽ ▽에서 관정 시추 현장인 00리 00-0번지에 민원인 대표(000)와 함께 현장확인 결과, 관정 4공을 굴착하였으며, 아직은 양수는 하지 않고 있음.

- ▽ ▽ ▽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정은 새로이 시추한 관정 인근에 있으며, 일 60톤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민원인 및 마을에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 ▽ ▽ ▽에서 최근 관정을 시추하고 많은 양의 지하수를 사용시 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주민과 인근 식당업주는 향후 지하수 고갈로 인하여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부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대관정 시추 및 양수 금지를 제천시에 요청하고 있음.
- 2009년 제천시(피고보조참가인: ▲ ▲ ▲)와 △ △ 리 마을간 지하수 개발에 따른 분쟁의 해결을 위한 청주지방법원의 조정권고안인 1일 200톤 이내로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도록 한 조정안이 현 사업주인 ▽ ▽ ▽에도 적용되는지는 법적인 문제로 확인을 하지 못하였음.
- ▽ ▽ ▽의 지하수 개발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4공의 관정 굴착작업 하였으나,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신청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음.

□ 관계 법령 등

-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 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판단 및 결론

- ▽ ▽ ▽는 현재도 시설물을 증축 중에 있어 관정 굴착으로 양수시에는 ▽ ▽ ▽ 인근 마을의 지하수 부족이 예상됨.
- ▽ ▽ ▽에서 00면 00리 00-0번지 일원에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이 있을시 제출한 지하수영향조사서는 전문기관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이해

당사자간의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함.

- 또한 2009년 지하수개발 분쟁시 청주지방법원의 조정권고내용의 법적 효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향후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 등으로 지역주민들께서 피해가 없도록 처리하도록 권고함.

□ **민원 제목** : 공유킵보드 공유서비스 관리 요청 민원

□ **신청취지**

- 제천시내 일원에 전동킵보드 공유 서비스가 도입되어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인도나 도로가에 무단으로 주차하여 통행에 불편하고 안전장치 없이 도로를 통행하여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함.

□ **피신청인 주장**

- 근래 제천시내 일원에 전동킵보드 공유 서비스가 도입되어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후 시민이 통행하는 공공장소나 인도에 아무렇게 주차하여 통행에 불편하고 도로 통행시 교통질서 위반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안전한 장소로 주차위치 변경과 관리를 요청하는 민원임.

□ **사실관계**

- 2021년 1월 제천시에 전동킵보드 공유서비스를 민간사업자가 도입하여 100대가 운영중에 있음.
- 대중교통 보완차원에서 전동킵보드 공유서비스 도입을 장려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일부 지자체는 금하고 있음.
- 도로교통법 등 현행법상 전동킵보드 운행에 관한 세부적 규정이 없어 단속이나 안전관리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 인도에 방치된 전동킵보드 단속은 노상적치물로 간주하여 소극적인 방법인 이동조치 방법(강제 수거 방법 없음)외는 없으며, 안전모 착용 및 이용자 준수사항의 미비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역 광장에 아무렇게 주차된 전동킵보드로 인하여 지역이미지 훼손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음.

□ **판단 및 결론**

- 전동킵보드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증가에 따라 전동킵보드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권고하여, 그 결과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를 제정하였음.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 2021.06.04 조례 제178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천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안전수칙 등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주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범구역 조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천시 관내에 시범구역을 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주차시설 설치) 시장은 공원, 하천, 자전거도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 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2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력체계 준수)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1. 6. 4.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